

데스크 시국



김미은 문화부장 겸 편집부국장

며칠 전 새롭게 문을 연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공연을 보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한창 감상하는데 객석 옆 통로로 누군가 훑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통로를 지난 남자는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갔고, 연주자들이 출입하는 커튼 뒤로 사라졌다. 간신히 연주에 몰입하고 있는 사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라졌던 그가 얼마 후 다시 무대에 등장했고, 조금 전 지나왔던 통로를 재차 지나갔다. 관객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무대 위 관악 연주자의 놀란 표정도 얼핏 보였다.

황당한 일은 또 있었다. 이번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이였다. 처음 이 쪽 통로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는 다음 곡이 연주될 때는 반대편 통로로 옮겨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야말로 때무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지자체 책임지는 자세 보이지 않고

공연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관객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다. 문화센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오늘 촬영을 위해 부른 외부 인력'이었다며 '주의를 주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상의 공연 관람 여건을 제공하는 건 공연장 관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이고 중요한 일이다.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를 일으킨 그들이 센터 직원이 아니라는 말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 외부 인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코로나와 함께'. 그동안의 제한적인 방역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아니면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 그 의미에 대한 온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보고 생각도 했을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에 거부감 보다는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 준비는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근거 없는 이야기 가 아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경과 및 연구에 의한 과학적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이와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전파의 경로와 특징, 감염자의 위험도에 따른 의료진의 대응 방법과 같은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방역과 감염병 치료의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백신은 맞아야 한다. 과학과 의학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신뢰해야 한다. 또한 그를 바탕으로 한 백신의 공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력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미션을 주는 것까지가 전부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외부 인력이라 할지라도 관람객들은 모두 '북구문화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여길 따름이다.

최근 문화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광주시의 문화정책 관련 '햇발질'을 몇 차례 보면서 문화센터 공무원과 시장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어떤 사안은 시장과의 암묵적인 합의나 시장의 의증을 파악한 것일 터다. 반면 어떤 사안들은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 시장으로서의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문화 현안들을 일일이 챙기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을 관장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만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광주시가 대안 없이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을 없애려다 반발에 부딪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게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광주문화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와 함께 공무원에게 다시 광장을 맡기는 안을 들고 나왔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최근 이 사태를 접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선 문화 전문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개관 28년 만에 도입한 제도를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려 한 광주시의 단선적인 사고에 놀랐다. 또 하나, 개방형 관장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착잡하기도 했다.

현 광주문예회관장은 선임 당시부터 뻔히 보이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누가 봐도 '예술 전문가'가 아니었고 이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현안이 산적한데 건강상의 이유로 내세워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개방형 해제 반대 성명을 내고 반발한 지역예술단체와 문화계 인사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다.

예술인들은 광주시 눈치나 살피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문화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했다.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공연계는 의외로 조용했다. 민예총이 성명서를 냈을 뿐, 대표 예술단체를 지칭하는 광주예총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소속 공연 관련 협회들이나 관계자들도 침묵을 지켰다. 혹시나 시에서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해 밍보이지 않을까 몸을 사린 건 아닌지, 향후 '어떤 자리들'을 염두에 두고 입을 닫은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시는 언론과 문화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무원 관장으로 현안을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쯤이면 다시 개방형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상황은 내년 지자체 선거와 맞물리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격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슷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지인'을 앉히는 거야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취임 초기, 몇몇 문화계 자리에 뜬금없는 인사들이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화계에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좀처럼 되찾기 어렵다. 그건 동화 속 '양치기 소년'이 잘 보여 준다. 자주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은 목이 쉬어라 외치지만, 슬프게도 더 이상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치단체나 그 책임자가 이리 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닌가. /mekim@kwangju.co.kr

단계적인 방역의 전환 '코로나와 함께'

정적인 측면과 여러 크고 작은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합의하여 사회적으로 백신을 수용한 합리적인 과정 또한 신뢰해야 한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단계적인 방역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9월 12일 기준 2000만 명(38.8%)이 접종을 완료했고 1차 접종자는 3300만 명(64.1%)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안 맞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확진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역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환자를 잘 치료해 사망자를 줄이는 치료의 영역으로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 치우쳐 있는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하여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만들고 치료를 위한 의료진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병상을 준비한 병원에 중증 코로나 환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경증의 코로나 환자 치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은 일선 병의원과 생활 치료 시설에서 하고 보건소는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증의 접촉자 동선 파악 등과 같은 역할조사로 그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치명률을 0.1%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방역의 단계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로 학교문을 열어야 한다. '등교 제한'은 방역의 실패

성이 낮고 학습과 정서적인 결손으로 인한 교육과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하므로 집단 감염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올해 1학기 학생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서 '학교 내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가정(48.7%)이나 지역사회(22.6%)보다 훨씬 낮았다. 학교는 학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정서적인 지역 사회 돌봄 기능을 같이 해야 하므로 문을 열어야 한다.

'코로나와 함께'는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거리 두기를 없애는 등 방역을 느슨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위험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조치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제 기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등 동체의 일상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친구들과 늦은 밤 워치지컬 술만도 벌이며, 2년 전 오늘처럼 거리를 뛰어나고도 싶지만 아직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나와 이웃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광주에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을 제안한다

는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영산강은 광주와 무관하다. 그동안 광주를 무등산과 광주천의 도시로 상징화한 결과다. 무서운 고정관념이 아닐 수 없다.

광주를 영산강의 도시로 받아들이기 때 광주의 놀라운 변화는 시작된다.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은 무등산과 영산강을 광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 광주는 아파트 건설 공사로 날을 새고,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는 '탐욕의 아파트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단의 각으로 도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영산강 수변에 국가 정원을 조성해 광주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대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025년까지 전국에 국가 정원 2400곳을 조성하려는 산림청의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과도 부합하는 프로젝트다.

그렇다면, 영산강 국가 정원으로 적합한 후보지는 어디가. 광주 영산강 수변에는 신창동 선사 유적공원에서 시작해 용산아구장까지 국가 정원에 적합한 부지가 널려 있다. 산동고 진수공원과 북구종합운동장, 첨단종합운동장, 첨단생활체육공원, 광주시민의 숲과 용산아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 생태공원이 산재해 있다. 이중 40만 평에 집단지성과 전문기적 식권을 동원해 아름다운 친환경·친시민 생태 국가 공원을 디자인하면 된다. 관련 법규상 먼저 3년간 광주시가 지방 정원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국가 정원 지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중 핵심은 신창동 선사유적지다. 한국 고대문화의 보고, 신창동 선사유적지는 영산강에서 반경 1.3km 이내에 있다. 탐방로를 통해 영산강과 연결된다. 신창동 선사유적지가 어떤 곳인가. 초기 철기시대에서 삼한시대에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 농경마을이다. 퇴적된 범사가 500톤을 넘는 동북아 최대 비농사 지대였다. 신창동 사람들은 2천 년 전 가족집에 비단옷을 입고, 철기를 사용하고, 현악기를 켜며, 고급 마차를 탔다. 2016년 가수 김원준은 신창동 처녀 마지를 소환해 '옛 산동고에서 마지를 기다리다'는 노래를 불렀다. 신창동 선사문화가 오늘의 문화예술, 창작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영산강 문명의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 다양한 출토 유물과 스토리는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에 최적의 조건이다. 광주공원이 이전할 경우, 이전 부지중 30만 평에 상당 그 이상의 아름다운 국가 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인근 제1호 국가 지정 도심 습지인 장륙습지와 연계하면 금상첨화다. 장기적으로 영산강을 따라 담양·장성·화순·나주, 영암 솔라시티까지 연결해 초광역 역사·문화·생태·관광 벨트를 조성하면 서남권 메가시티가 구축된다. 사람들은 영산강에서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 활력과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에 영산강 수변을 거닐며, 영산강의 도시 광주를 음미해 보자. 친환경 생태도시의 나래를 활짝 펴 보자. 옛 산동고에서 다시 마지를 만나는 꿈에 가슴 설레지 않는가. 영산강은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社說

단장도 없이 아시아문화도시 활성화 되겠나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17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추진단 단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겸직 방침은 문화전당 작제 개편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과장 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문화전당 역할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조치로 추진단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그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겸직 방침은 개정된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마관까지"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반발은 추진단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시절에는 추진단이 축소되거나 미니 부서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지역사회는 추진단의 위상 강화를 줄곧 요청해 왔다. 한때 문체부 과장이 추진단장을 겸직하게 되면 위상 강화는 고사하고 문화도시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본궤도로 오히려 5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추진단은 이를 추동하는 컨트롤러가 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추진단장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위상 강화를 통해 부처 간 협력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A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도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B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SNS에 애통함과 애도의 글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양 끝에 몰리면서 생전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단계 대화방에 글을 올린 한 자영업자는 "이번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라고 썼다. 다른 자영업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르테르호프는 일어나지 않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자신의 원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급을 주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을 마포구 주점 사장의 사연도 안타깝기 짝이 없다. 20여 년간 직원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기부도 열심이었다던 사람이라고 하니 더욱 찡하다.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리 두기 지침이 계속 연장되고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2년째 매출 하락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은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률적인 억제 위주의 정부 방역 체계와 부실한 지원책 탓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획일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無等鼓

프레임(frame)은 기본 틀이나 뼈대라는 뜻인데 유난히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호도하는 데 악용되면서 정치권의 프레임 전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로, 최근 검찰발(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개입 의혹'을 말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프레임 전략'이라고 말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큰 요동을 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야권에서 대권 후보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으로서의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크나큰 약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측은 곧바로 역공에 나섰다. '박지원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 원장은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측은 여전히 프레임으로 '고발 사주' 수세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에서 프레임이 무

서운 이유는 개인에게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고, 사회에서 주도권을 얻으면 더욱 이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할수록 듣는 사람들은 더욱 강한 인상을 갖는 것도 '프레임'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말했듯이 '팩트(사실) 체크만 해도 될 일'이다. 야권도 괜한 프레임을 내세워 정국을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사실관계만이라도 적극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기 고



박용수 한신대 초빙교수·정치학 박사

광주에 도발적 질문을 던진다. 광주는 광주천의 도시인가? 영산강의 도시인가? 답은 간단명료하다. 광주는 영산강의 도시다. 오랜 세월 광주의 상징,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천이 광주의 젓줄로 각인돼 있지만, 눈 떠 보니 광주는 영산강의 도시다. 서울이 한강의 도시, 평양이 대동강의 도시, 뉴욕이 허드슨강의 도시인 것처럼 광주는 영산강의 도시다. 아름답고 장대한 영산강이 광주 한복판을 관통하니 당연한 얘기다. 더 이상 광주를 광주천에 가둬 둘 수는 없다. 영산강은 담양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해 광주를 관통하고 나주 목포까지 장장 115.5km를 힘차게 내달린다. 그 물줄기를 따라 신창동 선사 문화와 미한, 백제문명이 부쳤했다. 오늘 은 끝없는 탐방길과 생태숲, 넉넉한 습터와 공원, 운동장은 물론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런데도 영산강은 여전히 광주와 무관한 전남의 강으로 치부되고 있다. 왜 그런가. 1988년 광산군과 송정리가 광주에 편입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 행정구역상 전남 땅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에 편입된 지 33년이 지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